

“호남에 애정·관심 없는 인물을 왜?”

뉴스 초점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 강행... 지역 반발 확산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력 과제 1호로 추진했던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이 허성관 초대 원장 임명 강행 파문으로 갈등과 분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허 원장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는 29일 허 원장의 자진사퇴 촉구와 허 원장 임명을 강행한 김수삼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시·도의회, 임명 반대 이유는=시의회와 도의회가 '원장 임명 효력저하'가처분신청' 움직임을 보이는 등 허 원장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 원장이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허 원장은 전남의 시·군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등 기본적인 현황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위원인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광주과기원장을 1년 5개월만에 그만뒀는데, 배경에는 검직하고 있던 포스코 사외이사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는 극명한 예"라고 밝혔다.

허 원장은 2005년 1월 행정부차관을 그만두고 광주과기원장에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2월 24일 포스코 사외이사로 등록, 당시 국회에서 검직문제 등이 거론되자 광주과기원장직을 그만뒀다.

허 원장은 청문회 당시 과학기술부의 압력으로 인해 광주과기원 예산 확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자진사퇴를 결정했다고 답변했지만, 청문위원들은 사실상 같은 답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예산 확보 불이익을 우려해 당시 광주과기원장을 그만 뒀다면, 이번 연구원장도 그만뒀어야 할 것"이라며 "광주전남연구원의 예산 심의를 하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예산 제재'를 하겠다

들끓는 시·도의회, 시민단체 "자진 사퇴하라" 장관 시절 대북송금 특검 영남정서 들어 찬성도

고 밝힌 만큼 연구원과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원장이 지난 2003년 해양수산부 장관 당시 대북 특검과 관련해 의견을 낸 국무위원 7명 중 유일하게 대북송금 특검 수송의견을 낸 점도 지적되고 있다. 청문회 당시 우승희 도의원은 "당시 특검 수용 근거로 영남지역의 정서와 상생의 정치를 들먹였는데 이는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원장은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해 지역주의를 부추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수삼 이사장 임명 강행 배경은=김 이사장은 허 원장의 임명은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의회 안팎에서는 우선 김 이사장과 허 원장의 '학연'을 의심하고 있다. 광주일교 동문으로 많은 인연을 맺어온 것이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학연과 인연'만으로 김 이사장이 독자적으로 '모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동교동계 인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허 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반면 동교동계와 인연이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는 연구원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며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 "광주·전남의 매우 중요한 상생의제였는데 안타깝다"며 "연구원 이사장이 어떤 지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시·도민 입장에서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허 원장의 자진사퇴'를 예뉘려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연구원 이사회의 전남도 추천 이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몇 차례 전달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시·도의회가 통합연구원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수장안의 핵심은 시도지사의 불개입"이라며 연구원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바랐다.

통합 연구원 첫 해부터 원장 임명으로 빛어진 갈등과 분란이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시·도의회가 벌써부터 연구원의 예산삭감을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싱크 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 활동이 원장 임명 파문으로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 60년 ... '뿌리당원' 6명에 들어보니 "계파 기득권 버리고 지역 인재 양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뿌리(원로) 당원들은 당이 '100년 정당'이 되려면 당 지도부가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기득권을 버리고 계파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이들은 당의 미래를 저해하는 요소로 일부 당 지도부의 독단적 당 운영방식과 기득권 행태, 분열 및 계파정치, 화장술 정치, 지역 인재양성 소홀 등을 꼽았다. 이들 문제는 당 지지층을 와해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선 당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이 호남 유권자들에게 더 이상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당원·당직자들이 계파·분열정치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새정치 광주시당 뿌리당원 6명은 광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선 당의 독단적인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당이 진노·비노로 나뉜 상황에서 당 대표가 비노 측 인사들도 끌어안아야 하는데, 사실상 비노 측 인사들과의 관계에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당내 갈등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계파정치도 당을 와해시키는 요소 중 하나라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이는 최근 일부 호남인사들이 당을 떠나 호남발 신당을 잇따라 창당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서로 계파간 기득권만 지키려는 상황에서 당내 화합은 커녕 분열만 조장해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일부 인사가 당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당원들은 당원대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 지지자들이 당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뿌리당원 김인순(여·66·당원경력 30년)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당 화합이 잘 됐다. 집회는 물론 행사에도 많은 이들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정 반대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당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인재양성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를 위해서 과감한 물갈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여졌다.

이들은 당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기득권을 버리는 등 양보와 배려 속에 당이 운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뿌리당원 신삼길(71·당원경력 30년)씨는 "현재로서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당이 사분오열 양상으로 치닫기만 마냥가지 않길"이라며 "당원 모두가 자신의 이익 보단 당을 우선시하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캠핑족들이 그린 가을풍경

28일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촬영한 광주시 남구 송촌보 캠핑장 모습. 늦가을 캠핑을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텐트를 짐삼아 자연 속 여유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170명 희망퇴직

전국 최다... 인력유출 심각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 직

장 등의 문제로 삶의 터전을 나주로 옮기기 어렵거나, 본사 이전 후 가족과 떨어져 '나홀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옮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총 인원 39명 중 8명(20.5%)이 퇴직해 희망퇴직 비율이 20%를 넘는 등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는 모두 170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 대구가 10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84명, 부산 71명, 경남 69명, 전북 66명 등의 순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청시모집 | 062)605-1114

문화전당 내달 25일 공식 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오는 11월25일 공식 개관한다.

<관련기사 5면>
 방성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지난 9월4일 문화전당 개관에 이어 오는 11월25일 공식 개관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식 개관 이후 문화전당 5개원(민중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은 전면 개방돼 시민들을 맞이하게 된다. 문화전당측은 지난 9월4일 개관 이후 그동안 전당의 일부 공간만을 개방해왔다.

공식 개관식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국내외 주요 문화기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전당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아시아 각국 문화장관급 인사들도 행사에 참석한다.

방 전당장 직무대리는 문화전당 콘텐츠(전시, 공연, 운영프로그램)와 관련, "9월 개관에서는 일부 콘텐츠만을 공개했으나, 공식 개관 때는 애초 목표로 문화전당의 모든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방자치 20년 국민행복 100년

올해로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는 **희망** 을 가지는 사람이 더 많고 **꿈** 을 꾸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 기간: 2015년 10월 29일 ~ 11월 1일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세종호수공원
- 주최: 행정자치부, 지방 4대협의체 등
- 주관: 행정자치부, 세종특별자치시

한일지방자치포럼

- 일시: 10월 31일 오후 2시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 주제: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